


목 차

	모빌리티 동향	12
해외	- 시동 꺼진 '애플카 프로젝트', 자동차 산업계 예의주시	12
	- 나의 운전자 습관 정보를 자동차 제조회사가 보험사와 공유한다?	13
정책	- 모빌리티 혁신의 실험장 열린다	15
	- 빅데이터 활용·광역교통망 신속구축 통한 권역별 교통대책 만든다	17
	- 「도심항공교통법」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	18
	- '공공시장 '드론' 조달방식 개선, 국내 드론제조기업 글로벌 성장 이끈다 ...	19
	- 부산시, 전국 최초 '개인형 이동장치-대중교통 환승 할인' 시범 운영	21
기업	- 현대차, 유럽 커넥티드카 거점 신설...獨 뮌헨에 법인 설립	22
	- 네이버, 사우디 '지능형 교통시스템' 구축 참여	23
	- 자율주행 AI, 더 똑똑해진다... 모자이크 없애 예측 성능 제고	24

시동 꺼진 '애플카 프로젝트', 자동차 산업계 예의주시

- 애플, 지난 10년 간 추진해 온 '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사업(애플카 프로젝트)'를 포기할 것을 공식화
 - 애플카 프로젝트(Titan)의 초기 목표는 레벨4(비상시 자동 대처)수준의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 및 양산하는 것으로, SDV(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 제어하는 차량)로 전환 중인 경쟁 구도 변화에 영향력이 컸던 상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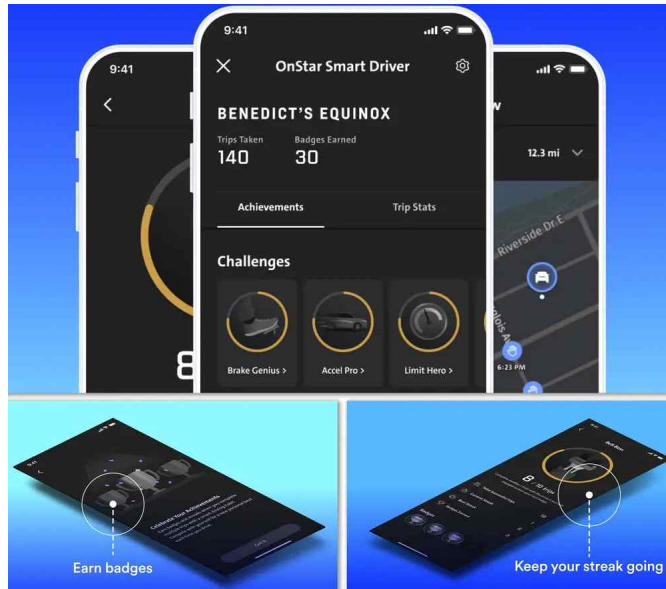
- 차량HW(하드웨어)의 경우 파트너십을 통한 역량 확보를 추진해 왔으나,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임
 - 주요 원인은, 완성차 사업의 특성상 애플의 차별화된 디자인·성능 구현과 낮은 공급 가격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분석
- 애플카 프로젝트가 중단됨에 따라 빅테크 기업이나 인포테인먼트 업체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
 - 빅테크·위탁생산업체 등의 완성차 직접 개발·제조에 대한 신규 진입 또는 확대 기대감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
 - 이는 SW 역량을 활용한 차량OS 구현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 판도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으나, 애플카의 프로젝트 중단은 이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
- 애플카 프로젝트는 중단됐으나 애플이 10년 간 차량 개발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및 데이터를 애플 Carplay 기능 고도화에 활용하여 서비스를 확장할 기회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전망
 - 업계, “완성차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나 자율주행 기술을 하드웨어에 결부시키고 고도화 시키는 숙제를 안게 됐다”는 의견

출처 : 산업일보, 시동 꺼진 '애플카 프로젝트', 자동차 산업계 예의주시 (2024.3.1.)

나의 운전자 습관 정보를 자동차 제조회사가 보험사와 공유한다?

- 미국 국적의 Kenn Dahl(65세), 사고를 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자동차보험료가 21% 상승했음을 통보 받음
 - 다른 보험회사의 견적 또한 높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Kenn Dahl은 보험료 상승과 관련된 자료를 보험사에 요청하였고, LexisNexis사의 보고서가 원인인 것으로 답변을 받음
 - LexisNexis사는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데이터 업체로, 자동차 보험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"Risk Solutions(위험 관리)" 부서를 두고 있음
 - Kenn Dahl의 요청에 따라, LexisNexis사는 공정 신용 보고법(Fair Credit Reporting Act)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258페이지 분량의 "소비자 공개 보고서"를 송부
- 보고서에는 그와 그의 아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자동차를 운전할 때의 운전 습관을 자세히 기록한 내용이 있었음
 - 해당 내용은 '차를 운전한 장소'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였으며, 여행 날짜, 주행 시작 및 종료 시간, 주행 거리, 과속, 급제동, 급가속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됨
- 보고서에 따르면 여행에 대한 세부 정보는 Kenn Dahl이 소유한 자동차의 제조업체인 제너럴 모터스(GM)에서 LexisNexis사로 제공된 것으로 드러남
 - LexisNexis사의 대변인 Dean Carney, "보험사가 보다 개인화된 보험 보장을 만들기 위해 개인별 위험 점수를 생성해야 하고, 그에 따라 운전 습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"고 설명
 - Kenn Dahl, "차량 제조사와 LexisNexis는 내가 공유 여부를 알지 못했던 나의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을 망치고 있다"고 언급
- 자동차 제조업체와 데이터 판매사는 상세한 운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운전자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
 - 소비자들은 작은 글씨로 작성되어 운전자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고, 모호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으로 동의를 얻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('제3자가 나의 운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'는 눈에 띄는 경고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)
 - 특히, GM의 커넥티드카 서비스 장치인 온스타 스마트 드라이버(OnStar Smart Driver)는 사용자가 그 기능을 '켜지 않은' 상태에서도 데이터가 집적돼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

〈OnStar Smart Driver〉



- 캘리포니아의 개인 정보 보호 규제 기관은 현재 자동차 제조업체의 데이터 수집 관행을 조사하고 있고,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에드워드 마키(Edward Markey)도 연방거래위원회(FTC)에 조사를 촉구하였음
 - 에드워드 마키, "사물인터넷이 모든 미국인의 삶에 실제로 침투하고 있다"며, "만일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와 보험회사가 공모하여 소비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면, 그것은 연방거래위원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"이라고 언급
- 시카고 대학의 법학 교수 옴리 벤 샤하르(Omri Ben-Shahar), "보험사는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 마일리지와 운전 습관을 모니터링하는 사용량 기반 보험을 선호한다"
 - "자동차 제조사들이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을 은밀하게 등록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"며
 - "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운전습관이 보험료와 연관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이점도 존재하지 않는다"고 설명

출처 : The New York Times, Automakers Are Sharing Consumers' Driving Behavior With Insurance Companies (2024.3.11.)

모빌리티 혁신의 실험장 열린다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, 2월 16일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
 - 혁신 위원회는 모빌리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,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등을 심의·의결함
 -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

①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(탈부착) 차량 제작 - 현대차

- 현대차,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(급속 20~40분, 완속 4~7시간) 전기차 단점을 보완해 충전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(5분 이내)해주는 서비스를 위해 배터리가 탈부착되는 전기차 제작 실증에 돌입

〈전기차 배터리 탈부착 사업 개념도〉



- 현행 「자동차관리법」은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제작 기준이 부재하고, 배터리 탈부착 행위는 차량 정비행위로서 등록된 정비사업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었으나,
- 이번 심의 통해 전문기관(자동차안전연구원)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 배터리 탈부착 차량의 시험 제작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함
- 현대차는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배터리 탈부착 차량을 안전하게 제작하는 실증부터 진행할 예정이며, 올해 하반기에는 실제 장거리 운행이 많은 택시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충전 스테이션을 이용한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해 추가 규제특례를 추진한다는 계획

②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(마스오토)

- 고속도로 등을 경유하여 주요 물류센터를 연결하는 자율주행 기반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 운송 서비스의 실증에 날설 예정

<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 사업 개념도>



- 현행 「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」은 연간 2,500대 이상의 차량을 제작하는 자기 인증 능력이 있는 제작사에 한해서만 연결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
- 이번 심의에서 스타트업 기업에게도 전자제어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전문기관(자동차안전연구원)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 받으면 연결 자동차를 이용한 실제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하기로 함

③ 택시 등 임시운전자격 부여(전국택시조합 등 3곳)

- 법인택시 및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 종사 희망자에게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(범죄경력 조회 등) 등록 후 나머지 절차는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임시운전 자격을 부여할 계획

<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 사업 개념도>



- 현행 「여객자동차법」 상 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통상 취득까지 1~2개월이 소요되어 택시기사 적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
- 이번 심의에서는 그동안 i.M택시 등 택시 플랫폼 6개 업체에 한해서 적용됐던 ‘선(先)운행, 후(後)자격 취득’ 제도를 일반 법인택시까지 전면 확대시행하기로 함

출처 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, 모빌리티 혁신의 실험장 열린다 (2024.2.16.)

빅데이터 활용·광역교통망 신속구축 통한 권역별 교통대책 만든다

- 정부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'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' 수립을 위한 2번째 정책 세미나를 개최
 -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이하 대광위)는 12일 대한교통학회, 한국교통연구원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함께 빅데이터 기반 교통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 세미나를 진행

〈광역교통망 자료사진〉



- 이번 세미나는 교통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열린 전문가,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
 - KT, '모바일 데이터 기반 교통 빅데이터 구축 기술' 소개에서, 이동 경로 및 교통수단 이용 패턴 추정 기술과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
 - 한국교통연구원, 모바일과 교통카드·내비게이션·신용카드 결제정보 등을 종합해 광역교통의 통행량, 통행시간, 광역버스 등의 혼잡도, 환승시간 등을 진단하는 방안을 소개
 - 대한교통학회, 탄소 감축 필요성과 혼잡비용 증가 등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력 활성화 방안으로 대중교통의 속도 향상과 2층·급행버스 도입, 교통비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발표
- 강희업 대광위원장, "통신·교통카드·내비게이션 데이터 등 교통 빅데이터에 기반해 통행량, 혼잡도 등을 진단하고, 수도권 권역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통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것"이라며
 - "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"이라고 밝힘

출처 : CBS노컷뉴스, 빅데이터 활용·광역교통망 신속구축 통한 권역별 교통대책 만든다 (2024.3.12.)

「도심항공교통법」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도심항공교통법) 제정에 따른 시행령·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(2.27.~4.8.) 할 예정

- 「도심항공교통법」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, 이를 위해 실증·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
- 또한,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음

〈도심항공교통법 주요내용〉

- (개념정의) UAM 항공기, 사업자, 버티포트, 회랑 등 구성요소의 개념 정의
- (규제특례) 기존 항공규제 해소,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규제운영체계 구축
 - 실증·시범구역 : 규제특례가 부여되는 3차원 공간을 지정
 - 규제특례 : 안전·보안·시설·사업 등 현행 항공 4개 법률 적용 배제, 다만 필요최소한 안전규제는 적용(다만,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)
- (사업 추진체계) 참여자인 실증·시범사업자 지정·관리, 인프라인 버티포트 개발 인허가 절차, 버티포트·회랑의 물리적 요건·기준 및 지정 절차 규정
- (생태계 조성) 기본계획, 행·재정적 지원, 국제협력, 인력양성·R&D 지원 등

-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-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·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,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되,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특례 절차를 세분화
- 실증·도심항공교통사업자(운송, 교통관리, 버티포트 운영·관리)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,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,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처리절차 규정 등 추진체계도 구체화

- 국토교통부 최승욱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, “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으로,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원활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”며

- “이번 하위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·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해나가고 있는데, 속도감있게 제정해 나가면서 법·제도를 완비할 계획”이라고 언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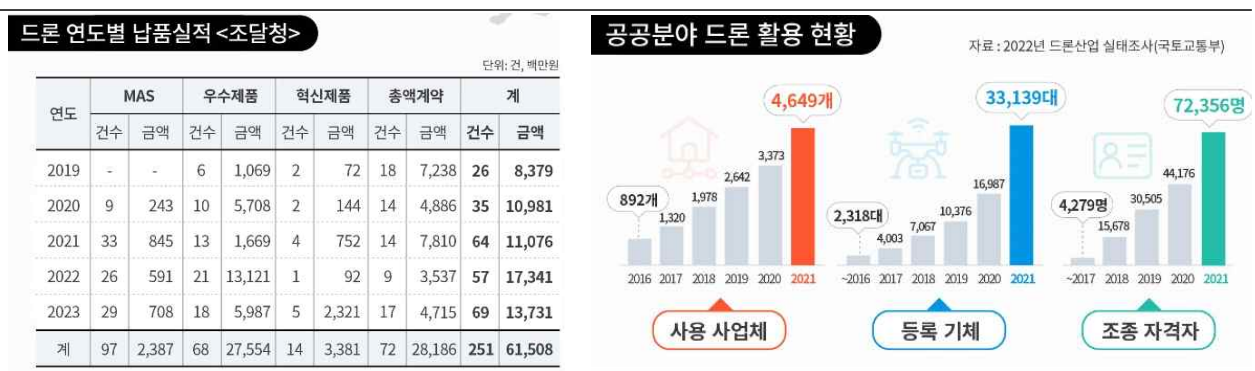
출처 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, 「도심항공교통법」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(2024.2.26.)

'공공시장 '드론' 조달방식 개선, 국내 드론제조기업 글로벌 성장 이끈다

■ 조달청(청장 임기근)은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되는 드론의 기술·품질 향상을 위해 조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, 판로지원을 강화하여, 국내 제조 드론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

- 조달청은 '18년 벤처나라에 드론 제품 등록을 시작으로 '19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 및 다수공급자제품을 등록하면서 공공시장에서 드론 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

〈공공분야 드론 현황〉



- 하지만 공공시장에서의 품질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, 조달청은 공공시장 드론 기술·품질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3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

-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①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 유도 ②공공기관 드론 운용역량 제고 ③드론 판로 확대 등으로 추진

①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 유도

- 기술 우수 국산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(25%) 보장, 우수조달물품·혁신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, 시범구매 시 성능을 향상시킨 경우 규격변경을 허용하는 등 국내 제조 드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할 계획

- 추가적으로,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, 혁신제품 평가 시 실물심사 실시, 성능평가시연이 이뤄지는 협상계약 적용 확대 등 품질평가도 강화 등을 실시할 예정

② 공공기관 드론 운용역량 제고

- 드론 사용자 조종자격 취득 교육 지원, '조달안전관리물자'로 지정·관리, 하자로 인한 사업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협의를 시 하자보수 보증기간 1년→2년 연장, 드론 종합보험 가입 유도 등을 추진 예정

③ 드론 판로 확대

- 공공부문에 드론 상품 발굴·공급 확대, 서비스 계약 등 계약방식 다양화 등을 추진
- 이를 위해 교육·실습용 등 상용 드론 쇼핑몰계약(다수공급자계약, MAS)을 추진하고, 혁신제품 지정·구매를 확대해 나갈 예정
- 조달청,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여 공공에서의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, 국내 제조 드론 제품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- 임기근 조달청장, “공공시장에서 드론의 품질 불량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품질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위해 조달방식 개선이 시급하다”며
 - “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국내 드론 제조기업이 창업·성장 및 글로벌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힘

출처 : 조달청 보도자료, '공공시장 '드론' 조달방식 개선으로 국내 드론제조기업 글로벌 성장 이끈다 (2024.3.4.)

부산시, 전국 최초 '개인형 이동장치-대중교통 환승 할인' 시범 운영

-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(PM)와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 할인 정책이 시범 운영됨
 - 개인형 이동장치(PM)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,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뜻함
 - 이 사업은 지난해 시가 발표한 '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'의 일환으로, 공유 PM을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

〈개인형 이동장치 모습〉



-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PM업체, 교통통합 결제 시스템 운영사와 함께 '공유 PM이용 안전 개선 및 안전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'을 체결하는 등 공유 PM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음
 -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'PM-대중교통 환승 할인사업'은 교통카드를 한 번 등록해두면, PM 이용 후 버스나 도시철도를 탈 때 교통카드를 찍기만 하면 요금이 할인되는 구조를 가짐
- 서울에서 공영자전거와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 시 정액권 형태로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이 있지만, 이 사업은 전체 PM을 대상으로 하며 교통카드를 통해 이용 즉시 할인 혜택을 주어진다는 차이가 존재
 - 시는 오는 5월부터 PM을 200대까지 늘리고 도시철도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, 시범사업 운영 후 성과분석을 통해 효과가 나타나면 부산시 적역으로 확대할 방침
- 박형준 부산시장, "이번 환승할인 시범 사업은 퍼스널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고, 15분 도시 가치 실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"이라고 언급

출처 : 노컷뉴스, 부산시, 전국 최초 '개인형 이동장치-대중교통 환승 할인' 시범 운영 (2024.3.5.)

현대차, 유럽 커넥티드카 거점 신설...獨 민헌에 법인 설립

- 현대차, 독일 민헌에 커넥티드카(Connected car, 통신연결 차량) 신사업 전개를 위한 조직을 신설
 -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커넥티드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유럽에 거점을 마련했다는 분석
 - 현대차는 향후 해당법인을 통해 글로벌 커넥티드카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
- 커넥티드카는 자동차의 소프트웨어에 무선 네트워크를 결합함으로써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이용자가 차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
 - 이용자는 기존 실시간 길 안내와 음성인식, 차량 원격 제어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도 차량 원격 진단 및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, 차량 내 간편결제 등을 이용 가능
-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독일에 커넥티드카 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음
 - 시장 규모 면에서는 북미와 중국이 적합할 수 있지만, 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투자에는 유럽이 더 유리하기 때문
 -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부 교수, “투자 신뢰성이 떨어지는 중국과 변동성이 큰 미국 대비 유럽은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”이라며
 - “유럽의 경우 정책의 변화가 롱텀으로 진행되다 보니 장기간에 걸친 R&D가 가능하다”고 설명
- 현대차그룹의 커넥티드카 서비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는 상황
 - 현대차그룹의 커넥티드카 서비스 가입자는 지난 2021년 8월 500만 명을 달성한 이후 급속히 증가해 지난해 6월 1000만 명을 돌파
 -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 ‘현대차 블루링크’ ‘기아 커넥트’ ‘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(GCS)’ 등을 운영 중
 - 최근에는 삼성전자 등 정보통신기술(ICT)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커넥티드카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

출처 : 이데일리, 현대차, 유럽 커넥티드카 거점 신설...獨 민헌에 법인 설립 (2024.3.7.)

네이버, 사우디 '지능형 교통시스템' 구축 참여

- 네이버, 3월 6일 사우디아라비아 대중교통공사인 SAPTCO(Saudi Public Transport Company)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

〈팀네이버-SAPTCO MOU 체결식〉



- 양사는 클라우드, 인공지능(AI), 비전, 디지털트윈 등 팀네이버의 첨단 기술을 통해 사우디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새로운 교통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
- 사우디 대중교통공사인 SAPTCO는 자회사 DMS(Digital Mobility Solutions)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서 약 8000대의 버스, 장거리 버스 및 기타 차량을 운영하는 중
-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디지털트윈 기반의 HD지도(차량용 고정밀지도)와 교통 상황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교통 인프라 개선에 협력한다는 계획
 - 사우디는 최근 대규모 인프라 및 주택 단지 확충 등으로 도시 내 교통 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관계로, 데이터 기반의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디지털트윈 기반의 교통 상황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
- 칼리드 알호가일 SAPTCO 최고경영자(CEO), “SAPTCO는 버스, 지하철뿐 아니라 차량 공유, 자율주행 차량, 자율전기 및 수소 차량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교통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”며
 - “네이버와의 협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강조
 - 채선주 네이버 대외/ESG 정책 대표, “클라우드 인프라부터 디지털트윈, AI 등 다양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는 SAPTCO의 최적의 파트너”라고 언급

출처 : 조선비즈, 네이버, 사우디 '지능형 교통시스템' 구축 참여... 사우디교통공사와MOU (2024.3.7.)

자율주행 AI, 더 똑똑해진다... 모자이크 없애 예측 성능 제고

- 사람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으로 진행하던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원본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림
 - 대한상공회의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'정보통신기술(ICT) 샌드박스 심의위원회'를 개최하여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'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'등 6가지 현안에 대하여 승인

〈카카오모빌리티의 영상 원본을 활용한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테스트〉



- 원본 영상을 활용하게 되면, 모자이크 처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, 차량과 보행자 행동에 대한 인식과 예측 성능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
-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이동연구소장, "자율주행 시범운영 지역 실증을 통해 차량 주변 인지 성능을 향상시켜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처 가능한 서비스 구현이 가능할 것"이라며
 - "규제 샌드박스과 체계화된 영상정보 관리를 통해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연구개발 속도 향상이 기대된다"고 밝힘
-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, "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기술 고도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번 영상 원본 활용 특례는 국내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발전에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"며
 - "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의 신기술 및 서비스가 꽃피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나갈 것"이라고 밝힘

출처 : 파이낸셜뉴스, 자율주행 AI, 더 똑똑해진다... 모자이크 없애 예측 성능 제고 (2024.3.7.)